

한국의 친복지태도 결정요인과 그 경로구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 상 훈**

(2009.5.28. 접수 / 2009.6.12. 1차수정 / 2009.6.19. 게재확정)

- 요약 -

본 연구는 탈계급론적 관점에서 한국 복지정치의 인식균열을 파악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가 어떠한 요인들과의 구조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분석의 준거로 사용한 ‘복지지위론’은 탈계급 논의의 통합적 이론틀로서,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분석자료는 2006년 복지패널조사이며, 복지지위론을 적용한 확증적 경로모형을 설정하여 통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인의 복지국가 지지성향을 결정하는 변수들의 경로구조를 탐색하였다.

주요변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 모형의 적합도는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이, 성별, 교육수준, 장애등급의 경우, 복지지위론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2006년도 기초연구지원 인문사회 창의주제 연구 과제번호 B00100)에 의한 것이다. 재단의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hoonco@snu.ac.kr)

의 방향성과 일치하며 통계적 유의성도 확인된다. 보다 직접적인 복지지위론의 매개변수들의 경우, 공공부문에 종사할수록, 공공부조수급액이 높을수록 복지국가찬성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몇몇 변수의 경우 모호한 경향을 보이지만, 복지지위론의 이론적 가설에 완전히 배치되지는 않으며 보다 이론적합적 자료를 분석할 경우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를 볼 때, 복지지위론에 입각한 친복지전략의 창출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탈계급론, 복지정치, 복지지위론, 확증적 경로모형,

LISREL

1. 서론

본 연구는 탈계급론적 견지에서 한국 복지정치 지형에서의 인식적 균열¹⁾을 파악하고, 복지국가에 대한 개인들의 태도가 어떠한 요인들과의 구조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확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사실, 사회과학 전반에서 정치적 균열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되어 온 것은 계급이었다(Giddens, 1982; 이성균, 2002; 조돈문, 2001).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권력자원론을 필두로 한 복지정치의 주류적 이론들이 계급을 중심으로 한 균열선에 기대어 복지정치를 논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다(Ahn, 2000; Palme, 1990).

하지만, 복지국가위기 논쟁 이후보다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적어도 1990년대 이후의 복지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급 개념이 과거와 같은 분석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Ahn, 2000; Kriesi 1998; Hall and Jaques, 1989). 실제로 근자의 사회정책학적 연구들은 복지정치에서 계급개념이 향유해 온 배타적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복지국가의 구체적 프로그램들과 관련된 이해관계성(interest-related) 사회균열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성과를 축적해왔다. 무엇보다, 사회정책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치적 균열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계급이 아닌 복지관련 지위²⁾들을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들은 몇가지 문제를 노정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복지국

-
- 1) 균열(cleavage)이란 정치투쟁의 장에서 행위자들을 상이한 그룹으로 구별 짓는 분리선을 일컫는다(Kriesi, 1998).
 - 2) 지위(status)개념에 비해 계급(class)개념이 이론적 간결성과 정밀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재론이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계급이라는 틀로서 설명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지위개념의 정밀화를 통한 균열구도의 재확인전략은 필요성이 인정된다할 것이다(Wolf, 1996; Ahn, 2000; 안상훈, 2002, 2003).

가의 일부분과 관련된 특정한 지위들을 분절적·단편적만 논의함으로써 복지정치의 총괄적 분석틀(comprehensive framework)을 제시하는 데 실패해온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분석의 틀거리로 사용하고자 하는 ‘복지지위론’은 이러한 탈계급 논의의 대표적 예외라고 할 수 있으며(Ahn, 2000), 본 연구는 2006년 복지패널 자료에 대해 복지지위론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s model)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인의 복지국가 지지성향을 결정하는 변수들의 경로구조를 탐색하고자 한다.

2. 복지정치에 관한 복지지위론의 논리

새로운 복지정치 균열들에 관한 논의로 옮겨가기에 앞서, 이들을 하나의 틀로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³⁾. 본 연구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자 하는 ‘복지지위론’은 ‘계급중심론(class-centered approach)’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확장된 이해관계 구조 속에서 복지정치를 파악하려는 새로운 논리에서 출발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계급적 균열을 토대로 복지정치를 해석하는 학자들이 주로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마샬의 시민권론이다. 시민권론이 복지정치의 설명틀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것이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을 권리의 축적적 확대라는 면에서 간명하게 정리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시민권에 기초한 계급론적 연구들은 종종 권리의 측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잘못을 저질러왔다. 복지정치를 보다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의무측면에도 주목

3)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 복지지위론의 한국 자료에 대한 실증적 적용이기 때문에 2장의 이론부분은 Ahn, 2000; 안상훈, 2002, 2003 등의 이론틀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기로 한다.

할 필요가 있음이 자명하다면, 이러한 오류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닐 것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복지와 관련된 권리가 확대되는 다른 한편으로 는 의무의 새로운 분배문제를 파생하게 된다. 마샬의 시민권론에서는 권리의 확대에 따른 의무의 확대 문제에 관해서도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Marshall, 1950; Pierson 1991). 복지정치의 이해관계가 권리를 중심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복지지위론이 계급론보다 근원적인 면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실체적인 접근임이 확인된다.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은, 복지국가위기 이후의 복지정치상황을 생각할 때 그 타당성이 더욱 확연해진다.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가 당면한 ‘새로운 정치적 상황’은 민영화 혹은 다원화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다. 그 이면을 보면, 국가복지의 비용축소정치가 자리하고 있다. 국가복지의 비용문제는 결국 개인들의 복지자원납부(혹은 세금)로 귀결되기에, ‘새로운 정치’는 권리의 측면보다는 의무의 측면에 보다 가까워진다. 적어도 권리에 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 계급론 혹은 계급투쟁론만으로는 현 단계 복지정치의 전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본 연구가 이론적 근간으로 삼는 복지지위론은 세 가지 복지관련 이해관계, 그리고 그에서 파생되는 지위차원들로 복지정치를 권리와 의무의 결합속에서 파악하고 있다. 세 가지 차원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이다.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는 의무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는 권리와 관련된다.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는 권리와 의무에 동시에 연결된다⁴⁾. 요컨대, 복지지위론의 분석차원들은 사회적 시민

4) 사회서비스부문의 국가복지가 발달한 나라에서의 복지제공자로서 여성의 의무는 개인적으로는 비용이라기보다는 고용가능성의 증대라는 견지에서 권리에

권이 의미하는 복지권의 확대와 더불어 시민권의 확대가 파생하는 개인적 의무 측면까지 동시에 고려한다).

먼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살펴보자. 한 사람이 공공복지의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복지국가 프로그램의 확장이나 축소에 대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기존연구들도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두어왔다. 대표적인 논의가 소비부문에서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Kemeny, 1981, 1985; Saunders, 1987, 1990). 소비부문에서의 균열논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풍요로 말미암아 기초적 물질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노력의 의미가 반감되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관심사는 생산부문에서 소비부문으로 전환되어왔다(Saunders, 1990; Dubin, 1956).

새로운 균열은 소비욕구를 사적 소득창출을 매개로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집단과 국가복지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집단 사이에 형성된다. 그 결과,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지향성은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정반대로 형성되게 된다. 다양한 복지정책들은 소비부문의 다양한 균열을 파생하게 되는데, 유럽복지국가의 정체 이후 등장한 세대간 갈등의 현상은 퇴직을 경계로 한 소비부문균열의 극명한 사례라 할 수 있다(Ahn and Olsson Hort, 1999). 복지국가발전에 따른 프로그램의 분화와, 이와 관련된 다중적 이해관계가 계급범주로 완벽하게 포착될 수 없는데 비해, 소비부문의 균열은 새로운 균열선의 한 차원이 될 수 있는 것이

가까운 측면이 많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서는 주로 개인의 의무로 파악될 수 있다. 가족의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권리의 강화이며, 가족적 의무의 수행이라는 면에서는 권리에서의 배제로 해석가능할 것이다.

- 5) 계급분석틀로 해석할 수 없는 다중적 이해관계균열의 예로는 연령과 관련된 모순적 측면을 들 수 있다. 연금수급권의 획득은 퇴직자 혹은 퇴직연령 근접자에게는 권리이며 복지수급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동연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는 일정정도 부담이 되며, 복지납세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겠다.

다.

거시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라는 미시범주는 복지 프로그램의 보편성 정도 및 그 질적 수준과 관련된다. 예컨대, 한 나라의 복지급여가 선별주의를 표방할수록,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게 될 것이지만, 복지급여의 질이 떨어질수록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정도는 낮아질 것이다(Kangas, 1995; Shaver, 1998). 따라서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지속적인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게 된다⁶⁾.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에서 도출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한 사람이 공공부문의 복지수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다음으로는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를 살펴보자. 전술한 바와 같이, ‘확장된 복지권이라는 동전’의 이면은 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재정적 부담이란 결국 복지권의 기회비용을 의미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지권을 획득하는 순간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포함한 의무를 파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복지국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른 방식의 재원조달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급 중심적 해석은 과도단순화로 흐르게 되며 보다 세부적인 의무의 확인이 필요해진다.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는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며,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의무의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국가를

6) 이러한 맥락에서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권들이 추진한 선별성의 강조, 즉, 자격요건의 축소조정, 급여수준의 하향조정 등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수와 이해관계의 수준을 저하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친복지적 지향성을 가진 인구의 수를 줄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안상훈, 2003).

지지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복지지위론의 설명방식은 복지정치의 복잡다단한 구조를 파헤치는데 위력을 발휘한다. 예컨대, 재정부담에 대한 합의수준이 국가 간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연구결과를 보면 적어도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관련 논의가 발견된다(Edlund, 1999; Wilensky, 1976; Steinmo, 1993; Marklund, 1988; 안상훈 2002). 최근의 복지국가 재편기를 통해 유럽복지국가들은 세금보다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높여왔는데, 사회보장기여금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세금보다 우월하며 복지반동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가복지의 재원마련을 세금으로 할 경우에도,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감춤효과가 커서 조세반동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와 관계된 이해관계가 새로운 균열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복지재정의 마련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의 빈도와 강도 모두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에서 도출되는 주요가설은 다음과 같다: 세금이나 기여금을 많이 내야할수록 그 사람이 복지국가를 반대할 가능성은 증가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세 가지 지위차원의 마지막은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이다. 이 지위는 계급론 연구의 틀 내에서는 중간계급에 관한 연구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진다. 복지국가의 발전은 복지관련 행정 및 서비스 부문의 확대에 이어졌고, 이 부문에 고용된 사람들은 계급론적 어법으로는 신중간계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의 피고용인으로서의 신중간계급은 선진복지국가에서 괄목할 수준으로 성장해왔다. 신베버주의에서는 신중간계급을 ‘서비스 계급’으로 정의하는데, 이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위임된 권위, 특화된 지식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그들이 고용된 조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향을 보인다(Erikson and Goldthorpe, 1992; Goldthorpe, 1995).

주지하다시피, 중간계급 혹은 서비스계급은 다른 계급범주에 비해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닌다. 지배인, 기술관료, 사회문화전문가 등이 이 범주에 속하는데, 특히 사회문화전문가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나타낸다. 신사회운동에 열광하며, 좌파정당을 지지하는 등, 다른 범주들이 대체로 보수성향을 보이는 것과 대조된다. 따라서 ‘중간계급의 급진성(Parkin, 1968)’은 보다 정확하게 보자면 ‘사회문화전문가의 급진성’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Jenkins and Wallace, 1996; Heath et al., 1991⁷⁾).

사회문화전문가의 급진성이라는 현상은 복지국가에 의한 공공부문의 확장과 직결된다. 복지국가 내에서 사회문화전문가로 분류되는 직업범주의 대부분은 공공부문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바탕 하게 된다. 이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사부문 노동자들 간의 균열을 발생시킨다. 사부문의 노동자들은 복지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업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반면, 복지국가의 축소는 공공부문의 축소를 의미하며, 공공부문의 축소는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퇴출을 의미하게 되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복지국가의 축소를 바라지 않게 되는 것이다(Taylor-Gooby, 1991; Dunleavy, 1980, 1986; Zetterberg, 1985).

한 가지 중요하게 덧붙일 것은, 이러한 균열이 ‘성(gender)’이라는 탈계급적인 균열과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산업사회의 풍요에 따라 생산과 고용의 중요성이 희석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이러한 얘기가 여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양차대전 이후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여성고용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공공부문의 확대에 기인한다(Sainsbury, 1996; Paukert, 1984⁸⁾). 복

7) 사회문화전문가의 모순적 태도는 직업적 경험과 연관된 도덕적 가치형성과정에 의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부문의 전문직 종사자들, 특히 공공부문의 사회전문가들은 주로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일상 업무로 한다. 이러한 일상의 체임을 통해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험의 누적은 그들의 가치관을 진보적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Kriesi, 1998).

지국가의 발전에 의한 공공부문의 확대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쌍방향 효과를 가진다.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이었던 육아나 노인부양의 의무가 국가부문으로 이전되어 여성 사회활동의 배경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위한 직업부문의 확장을 통해 그들의 취업기회를 고양하게 된다. 즉, 공공부문의 고용확대는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였고, 실제로도 공·사부문의 직업균열은 노동부문의 성적인 균열과 겹친다(Esping-Andersen, 1990; Svallfors, 1995; Crompton, 1993). 동시에, 여성은 더 빈곤하고, 더 오래 살기 때문에 복지국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향유할 공산이 상대적으로 높다(Hernes, 1987; Piven, 1985; Wennemo, 1994).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와 관련될 때, 복지국가를 지지할 가능성이 남성의 경우보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고 보여진다.

요컨대, 복지국가와 관련된 두 가지의 이해관계균열이 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지위라는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복지국가를 지지할 확률이 높다. 둘째, 남성보다는 여성이 복지국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8)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업무도 결국은 기존의 전통적 여성역할의 전이된 형태에 불과하며, 20세기 여성의 사회참여는 ‘가부장제적 억압’의 현대적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이 있기는 하다(Sainsbury, 1994; Walby, 1990; Quadagno, 1990; Balbo, 1987). 하지만, 이해관계의 균열에 관한 합리적 분석을 지향하는 본 연구의 관점에서 보자면, 직업부문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균열은 성적 균열과 연관될 때, 정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잉태할 것으로 가정된다.

3. 복지정치의 탈계급적 균열요인에 관한 기존의 경험 연구

최근 복지정치 연구의 새로운 연구경향은 국가복지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등장한 배경에는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비판과 그에 따른 복지국가의 정당성 위기가 자리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논할 때, 그 사회의 개인들이 국가복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복지정치와 관련된 개인적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계급범주의 타당성에 대한 이론적 논쟁을 경험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학술적 논의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Svallfors, 1995; 안상훈, 2003; Ahn, 2000).

계급개념의 희석이라는 논쟁거리와 관련된 기존의 몇몇 실증연구들은 계급이 공공복지정책이나 불평등에 관한 이슈에 있어, 태도나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틀이며,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Evans, 1993; Svallfors, 1997, 1995; Goldthorpe & Marshall, 1992). 하지만 보다 최근의 논의들, 특히 보다 정치한 자료와 보다 세련된 분석에 근거한 실증연구들은 새로운 균열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그 설명력 또한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탈계급론적 실증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계급론과 탈계급론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하나인 Svallfors(1997)의 경우, 성(gender)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그 영향력도 다른 모든 종류의 탈계급적 변수들을 뛰어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vallfors, 1997)⁹⁾. 연령이나 세대에 관한

9) 이 연구에서는 단편적 회귀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성, 고용부문, 연령 등의 변수들을 계급변수들과 동일선상에서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성이나 고용부문, 연령 등은 각기 상이한 범주들로 다시 정리되어야 한다는 본 연구의 관점

Hammarström(1998)의 태도분석을 보면, 응답자의 객관적 상황이나 자기이해, 그리고 노인에 대한 집합적 의무에 관한 규범적 가치가 공적·사적 재정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며, 계급, 성, 연령 중에서는 연령이 가장 영향력 높은 결정변수로 보고된다. 노인이 중년이나 청년에 비해 공적 재정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는 연령상 차이가 복지국가 발전과 위기와 관련된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를 잉태하기 때문인 것으로 주장된다(ibid.).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보호의 재정, 성취, 행정에 관한 개인들의 관점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다루고 있는데, 1998년의 연구와 동일한 패턴을 보고하고 있다(Hammarström, 2000).

근자의 태도연구들이 탈계급적 변수들의 통계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표행위에 관한 기존 실증연구들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과거 계급투쟁의 연장선에서 전개된 스웨덴의 복지정치가 퇴색되고 있으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스웨덴 모델’의 전통적 특징인 계급정치의 토대를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SOU, 1990; Ahn, 2000). 이와 관련해서, 근자 유럽정치의 주요한 균열이 계급 혹은 위계적인(hierarchical) 것에서 이탈하여 복잡다단한 개인적 이유들로 변화했음을 확인한 연구들도 있다(Petersson, 1990; Sihvo & Uusitalo, 1995). 보다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틀로 삼고 있는 복지지위의 세 가지 차원들이 기존의 계급 분석틀 보다 복지태도와 정치적 선호 혹은 투표행위에서 더욱 영향력 있음을 실증적 비교분석을 통해 밝히기도 하였다(Ahn, 2000; 안상훈, 2002, 2003).

에서 볼 때, 경로모형이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성과 고용부문은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Sainsbury, 1994, 1996), 각각을 마치 독립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특히, 그의 연구들에서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아무런 고려가 없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확인되는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고려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사실, 한국 상황에 관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도 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계급에 기초하여 해석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만, 계급모순적인 성격으로 해석할 뿐, 탈계급적인 구조의 파악에까지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김영란, 1995;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백정미 외, 2008). 이들은 계급외적 혹은 탈계급적 변수들이 계급변수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한국 사회에서 계급정치의 미성숙으로 치부하거나 다른 요인들이 계급정치에 대한 일종의 장애물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탈계급적인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거나 계급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할 것 없이, 이론적인 출발점인 계급론에만 기대어 결과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보면, 최근의 선진국 복지정치와 한국 복지정치에서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탈계급 변수들에 관한 통합적 구조분석을 시도한다는 면에서 본연구의 가치가 드러난다.

요컨대, 공공복지에 대한 개인적 태도가 구조적 균열에서 파생된다는 결론을 도출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동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적어도 서구에서의 복지국가를 탄생시켰던 정치투쟁의 기초로 알려진 계급균열의 현실적 타당성은 최근 들어 희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공공복지 관련 정치행위나 정치태도의 결정요인이 복잡다단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분석틀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다중성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차원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아래에서는 기존의 경험연구들이 공유하는 이러한 결론이 한국 복지정치에 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해 지지되는지 확인하기로 하자.

4. 분석자료 및 방법

여기서 분석되는 변수의 항목들은 200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추출하였다¹⁰⁾. 200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는 설문지가 3종으로 이루어져있는데, 그 중에서 가구용설문지와 가구원용설문지에 대한 응답 자료를 통합하여 개인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구성하고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결측치를 제외할 때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표본크기는 14,216명이다¹¹⁾.

최종내생변수, 즉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는 종속변수는 ‘복지국가찬성’이다. 이 변수를 측정할 문항은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대하여, ‘세금 부담이 낮고 복지수준이 낮은 사회’에서 ‘세금부담이 높고, 복지수준이 높은 사회’에 이르는 5점 척도의 응답지로 구성된다¹²⁾.

복지지위론의 세 가지의 지위차원들과 관련된 변수들은 총 7개이다. 이들은 다시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나이’¹³⁾, ‘교육수준’¹⁴⁾, ‘장

10) 한국복지패널자료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관련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11) 주지하다시피,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빈곤가구에 대한 과대표집(amplified sampling)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어, 기술분석 등에서는 가중치를 반영하여야 전국 대표성에 입각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투입하여 변수와 요인간 혹은 변수와 변수들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가중치의 적용여부가 그다지 큰 문제로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 적용 면에서도, 구조방정식모형을 다루는 통계프로그램들에서 가중치 적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존에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기술분석이 아닌 변수간 관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도 본연구와 동일한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적어도 상관성의 맥락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2) 원점수는 복지수준이 낮은 경우가 5점이나, 여기서는 점수를 반대로 재점수화하였다.

13) 나이는 2007년 기준 만 나이로 계산됨

14) 교육수준은 무학(1)에서 대학원(7)까지 7점 척도로 구성

에등급¹⁵⁾, ‘성별’¹⁶⁾의 변수는 외생변수로, ‘공공부조수금액’¹⁷⁾, ‘경상소득총액’¹⁸⁾, ‘공공부문근로’¹⁹⁾는 중간에 위치하는 내생변수로 다루어진다. 4개의 외생변수들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로서 나머지 3개의 중간 내생변수들과 최종 내생변수의 원인변수로 설정된다²⁰⁾.

복지지위론의 3가지 차원과 일대일로 조응되는 변수들은 중간단계에 위치하는 3개의 내생변수들이다.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에는 공공부문근로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에는 공공부조수금액이,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에는 경상소득총액의 변수들이 연계된다.

이들 변수들 사이의 경로적 인과관계는 LISREL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LISREL분석에서는 기존의 많은 통계기법들과는 달리, 주어진 원자료(raw data)를 바로 투입할 수 없고, 대신 상관관계행렬(correlation matrix)이나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을 투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의 실제 수량적 측면보다는 상대적 영향정도에 관심을 두

15) 비등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0점으로, 장애등급 6급을 6으로 7점 척도로 구성

16) 남성 0, 여성 1

17) 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금액, 만원단위. 이 변수에 대해서는 몇가지 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여기서 수급여부가 아닌 수금액을 변수로 채용한 이유는, 복지 지위론에서 상징하는 지위차원이 1과 0으로 코딩되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는 것이며, 따라서 수급여부보다 수금액이 보다 면밀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둘째, 수금액이 가구원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구원수를 통제하여야 한다는 잠정적인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구원수가 많으면서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것 자체가 가구원들의 인식차원에서의 공공부조에 대한 밀착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 복지지위론의 기본논리이자 전제가 된다.

18) 만원단위. 이 변수는 계급을 표상하는 변수일 수도 있다(Ahn, 2000). 하지만, 복지지위론 자체가 계급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탈계급론의 과편성을 뛰어넘어 최종적인 통합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면, 계급적으로 해석가능한 변수를 복지 지위론의 납세자지위 차원과 연결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여겨진다.

19) 공공부문 종사자 1, 나머지 0

20) 외생변수들도 암묵적으로는 복지지위론의 3가지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이와 장애등급은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 교육수준은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 성별은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와 관련된다.

기 때문에, 상관관계행렬을 투입하였다²¹⁾.

LISREL은 탐색적 목적이나 가설검증의 목적 양자에 모두 부합되는 방법인데(Jöreskog and Sörbom, 1988; Kelloway, 1998; Bollen, 1989; Bollen and Long, 1993; Hayduk, 1987),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주목적으로 한다. LISREL을 사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확증적 경로분석(confirmatory path analysis)을 채택하고자 한다. 변수간의 인과관계구조가 실제로 타당한지 여부는 이론적으로 제시된 가설에 따른 관계가 실증적 타당성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총체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다²²⁾. LISREL의 경로분석은 기존의 경로분석과 비슷한 맥락에서 행해지지만, 대안적 모형들의 적합도를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 값들이 산출되는 까닭에 몇 가지의 경쟁적인 인과모형들을 상호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모형이 내포하는 관계들의 신뢰도는 R²값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데, 특정 관계의 방정식이 통계적으로 유의²³⁾하다라는 전제 하에 R² 값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LISREL의 경로모형도 선형통계 모형의 하나이므로, 관계의 강도는 계수(coefficient)값의 크기로 판단하고, 이는 지표와 구성체 사이의 관계 및 구성체들 사이의 관계 모두에 해당된다.

21) 그렇다면, 상관관계행렬 중 어떠한 종류를 택할 것인가? 사회과학연구들에서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이것인데, 주어진 변수들이 연속변수가 아닌 데도, Pearson의 상관관계를 투입하는 경우이다. 조사연구에서 수집되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의 변수들은 대개 서열변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도 Pearson의 상관관계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경우에는 투입된 변수들의 성격에 따라, polychoric 상관관계, tetrachoric 상관관계, 혹은 polyserial 상관관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Bollen, 1989).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경우, 변수들은 서열변수적 성격을 띠다고 보이므로, PRELIS프로그램에서 polychoric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부가명령을 첨가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Jöreskog과 Sörbom의 1988판 PRELIS 매뉴얼을 참조하라.

22) 통계적 용어로는 nomological validity를 검증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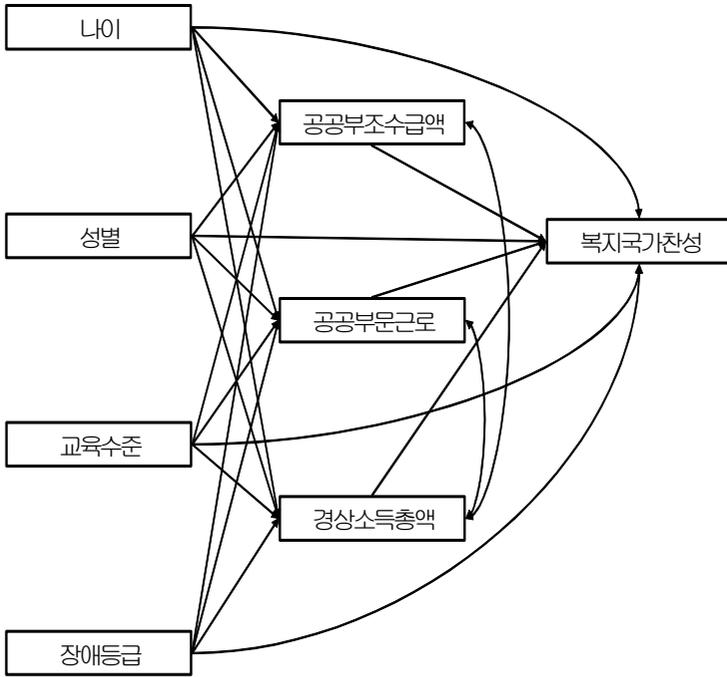
23) 즉, 양측검정시의 t값이 1.96을 넘는 경우를 말한다.

각 모형의 타당도는 주어진 자유도에서의 χ^2 가 지니는 유의도를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 하지만, 이 기준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문제점을 지니는데, 표본크기가 큰 조사의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χ^2 는 표본크기와 함수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표본크기에 민감한 결점을 지닌다(Kelloway, 1998).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표본수가 2000을 넘으면 χ^2 의 적합도판정을 통과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Boomsma, 1983; Baer, 1998). 본 연구의 표본수는 14,216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대안적인 판단준거가 필요하게 된다. 대안적 모형적합도(goodness of model fit)들이 다수 제안된 바 있으나(Bollen, 1989; Jöreskog and Sörbom, 1993; Kelloway, 1998),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χ^2 와 RMSEA를 동시에 고려하여 적합도를 판정한다.

5. 분석결과

복지지위론에 따르면 친복지적 정치태도는 3가지 차원의 복지지위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된다. 변수간의 가설적 인과경로를 규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수급자로서의 지위는 친복지적 정치태도와 양의 방향으로 연결된다. 둘째, 복지서비스제공자로서의 지위 또한 친복지적 정치태도와 양의 방향으로 연결된다. 마지막으로,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는 친복지적 정치태도와 음의 방향으로 연결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모형은 복지지위론의 인과방향을 따르고 있지만, 3가지의 차원을 독립적인 잠재변수로 묶지 않는 확증적 경로분석모형이다. 여기서는 <그림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주로 중간단계의 3가지 변수를 복지지위론과 연결하여 파악하고 있다.

<그림1> 친복지적 정치태도의 결정요인구조



<그림1>에서 보이는 모형을 추정한 결과,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χ^2 는 자유도 1에서 1.33, p값 0.25로 모형이 자료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RMSEA는 0.0048로서 기준값 대비 충분한 수준이며, 90%신뢰구간도 이 값을 포함한다.

<표1> 모형적합도

적합도	지수값	p값/ 90% 신뢰구간
χ^2	1.33(df=1)	0.25
RMSEA	0.0048	0.0: 0.023

<표2> 변수간의 직접효과

종속변수	독립 변수							R2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장애 등급	공공부문 근로	경상소득 총액	공공부조 수급액	
공공부문 근로	-0.030	0.33	0.68	-0.099	-	-		0.32
경상소득 총액	0.019	0.048	0.48	-0.096	-	-		0.23
공공부조 수급액	0.12	-0.032	-0.080	0.18	-	-		0.048
복지국가 찬성	0.028	0.090	0.13	0.042	0.069	0.011	0.066	0.025
	3.04	7.87	9.74	4.60	6.66	1.18	7.78	

주) 각 셀의 위는 계수, 아래는 t값

<표2>는 개별 변수들이 해당 종속변수에 대해 지니는 직접효과를 보여준다²⁴⁾. 먼저,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에 대해 살펴보자. 여성보다는 남성,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공공부문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관계의 R2는 0.32로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경상소득총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관계의 R2 역시 0.23으로 수용가능한 수준이다. 공공부조수급액의 수준은 여성일 경우, 나이가 적을수록,

24) 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4>에 나와 있다.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관계의 R2는 0.048로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외생변수와 매개변수 사이의 관계경로는 복지지위론과 완전히 맥이 닿지는 않으며, 자료가 제공하는 선에서 외생변수 성격을 지니는 것들과 요인적 성격에 가까운 변수들 사이의 연결짓기를 시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사실, 예컨대 양성간 정치성(inter-gender politics)에 대한 복지지위론의 논리를 직접적인 성별변수로만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변수만 하더라도 제대로 계측되기 위해서는 ‘성(gender)’라는 요인에 결부되는 다양한 하위지표로 보다 정치하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성’이 복지지위론에서 중요한 이유는 예컨대 아동돌봄부담, 사회생활욕구 등과 같은 다양한 실제 생활 지표에 의해 표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에서의 분석이 최적화된 설문을 가진 자료에 대한 분석이 아닌 서설적 분석에 불과하며, 추후 보다 이론들에 부합한 자료에 의해 재검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복지국가찬성에 대한 직접효과들의 R2도 0.025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지만, 일단 분석결과 나타난 직접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첫째, 남성보다는 여성이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gender) 차이가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복지지위론의 논리나 기존의 경험연구와 동일한 것이다. 둘째, 나이가 많을수록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이론적인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과 소득의 상관성에도 불구하고 나타날 수 있는 태도상의 모순적 현상, 즉 중간계급의 급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복지국가와 관련된 이해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국가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다. 장애등급이 높을수록 복지국가를 필요로 하게 되므로, 복지국가찬성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복지지원론의 맥락에서 매우 당연한 경향이다. 이들 변수에 대해서는 간접효과와 총효과 역시 여기서 설명한 경향을 그대로 보여준다²⁵⁾.

복지지원론의 세 가지 차원을 보다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3개의 변수들을 살펴보자. 이론적으로는, 공공부문에 종사할수록, 경상소득총액이 낮을수록, 공공부조수급액이 높을수록 복지국가찬성수준이 높아야 할 것이다. 대체로 이러한 이론적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보이고 있으나, 경상소득총액의 경우는 그 계수값이 예상과 반대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값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이론적 가설이 완전히 기각된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이다.

<표3> 오차공분산

error covariance between	계수, t값
공공근로부문근로, 경상소득총액	0.17, 27.45
공공부조수급액, 경상소득총액	-0.05, -6.87

<표3>은 중간단계 변수들 중에서 두 조합에 대한 오차공분산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근로와 경상소득총액을 연결시킨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문에 종사한다는 것이 지니는 노동시장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상식적으로도 공공부문은 매우 안정적인 일자리이자 소득원으로 받아들여지며, 여기서의 결과는 이러한 상식적 관계를 재확인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경상소득총액과 공공부조수급액 역시 반비례관계가 예상되어 모형특정화에 반영하였는데, 분석결과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다.

25) <표4>를 참조하라.

<표4> 변수간 총효과와 간접효과

		독립변수							
		성별		나이		교육수준		장애등급	
		총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간접 효과	총 효과	간접 효과
종속 변수	복지국가 찬성	0.03 3.72	0.01 4.47	0.11 10.07	0.02 6.06	0.18 15.68	0.05 6.23	0.05 5.13	0.00 1.96

주) 각 셀의 위는 계수, 아래는 t값

<표4>는 <표2>와 <표3>의 해석 중 일부에서 확인되었던 분석 결과 해석상의 문제가 복지지위론의 논리와 자료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일뿐, 기본적으로는 모든 변수들의 외생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복지 지위론에서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4>에 나타나는 바, 간접효과보다는 총효과가 거의 절대적으로 큰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 분석에서 대안적으로 설정한 매개변수를 통한 영향력보다는 직접적으로 최종 내생변수인 복지국가 찬성에 미치는 외생변수들의 영향력 부분이 분석적으로도 훨씬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치에 관한 탈계급적 분석틀인 ‘복지지위론’의 맥락에서 한국인의 복지국가 지지성향과 그 결정구조를 탐색하였다. 분석결과의 불완전성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위론의 3가지 차원과 관련된 인과구조는 우리의 분석에서도 대체로 의미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

학술적으로는, 계급 중심적인 기존의 시각을 복지 중심적인 통합적 분석틀로 전환한 복지지위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시적 차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복지국가에 관한 지지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관한 메커니즘의 탐구는 복지정치연구의 ‘상대적 미개척지’로 남아있는데, 여기서 살펴본 가설적 모형은 이러한 연구의 빈공간을 메우는 서설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보다 국민감정 친화적인 혹은 국민의식 수용적인 정책을 생산해내기 위한 이정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증분석에서 얻어진 결과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지니는 사회경제적 지위들이 복지욕구를 강하게 유발할 경우, 특히 복지국가의 수혜를 경험할 경우에 복지국가의 지지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수혜계층의 확대자체가 복지국가 지지세력의 확대를 낳힐 것이라는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함의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복지국가를 더욱 긍정적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 국가공무원의 맹목적 확대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다양한 맥락에서 국가 혹은 사회와 연결되는 사회복지 관련 직종의 확대다변화를 기한다면, 이 역시 복지국가 지지기반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서구의 자료에 관한 연구와 달리, 우리의 경우에 복지납세자로서의 지위가 노정하는 반복지정치의 영향력은 모호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낮은 세율과 높은 면세점에 기인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직까지는 세금을 조금 더 늘릴 여지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복지욕구의 증대,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정책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세수의 확대정책을 통해 정치적으로 보다 견고한,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본 연구가 노정하는 자료의 한계로 말미암아, 보다 정교한 복지태도의 지형을 확인할 때까지 최종 결론을 유보해야겠지만 말이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복지국가의 확장 혹은 축소에 관한 일련의 정치적 연구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성이 높은 복지국가 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리라. 복지국가의 창출과 사회공학이 동치가 아니라는 사실, 복지정치의 전략적 사고에 관한 학계의 재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참고문헌

- 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복지인식구조의 국가간 비교: 시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한국사회복지』 37.
- 김영란, 1995, “이데올로기와 복지태도”, 『고려사회학논집』 9.
- 안상훈, 2002, “계급정치의 희석과 복지국가의 대안적 방어기제”, 『사회복지연구』 19.
- _____, 2003, “친복지동맹의 복지지위균열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비교연구”, 『사회복지연구』 21.
-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2).
-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1).
- Ahn, S. H., 2000, *Pro-Welfare Politics: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ppsala: Univesitetstryckeriet.
- Ahn, S. H. and Olsson Hort, S. E., 1999, "The Politics of Old Age in Sweden", *In The Politics of Old Age in Europe*, edited by A. Walker and G. Naegele.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Baer, D., 1998,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 Michigan: ICPSR
- Balbo, L., 1987, "Family, Women and the State", *In Changing Boundaries of Political*, edited by C. S. Mai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llen, K. A., 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Bollen, K. A. and Long, J. S., 1993, *Introduction. In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ed. K. A. Bollen and J. S. Long., Beverly Hills, CA: Sage.
- Boomsma, A., 1983, *On the Robustness of LISREL(maximum likelyhood estimation) against Small Sample Size and Nonnorma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Netherlands: University of Groningen.
- Crompton, R., 1993, *Class and Stratification: An Introduction to Current Debates*,

- Cambridge: Polity Press.
- Dubin, R., 1956, "Industrial Workers' Worlds: A Study of the Central Life Interests of Industrial Workers", *Social Problems* 3.
- Dunleavy, P., 1980,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Sectional Cleavages and the Growth of State Employment", *Political Studies* 28.
- Edlund, J., 1999, *Citizens and Taxation: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Umeå: Umeå universitetets tryckeri.
- Erikson, R. and Goldthorpe, J. H., 1992, *The Constant Flux: A Study of Class Mob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Polity Press.
- Evans, G., 1993, "The Decline of Class Divisions in Britain? Class and Ideological Preferences in the 1960s and the 1980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 pp.449-471.
- Giddens, A., 1982, *Class Division, Class conflict and Citizenship Rights*, In *Profiles and Critiques in Social Theory*, London: Macmillan.
- Goldthorpe, J. H., 1995, *The Service Class Revisited*, In *Social Change and the Middle Classes*, edited by T. Butler and M. Savage, London: UCL Press.
- Goldthorpe, J. H. and Marshall, G., 1992, *The Promising Future of Class Analysis: A Response to Recent Critiques*, *Sociology* 27, pp.381-400
- Hall, S. and Jaques, M., 1989, *New Times: The Changing Face of Politics in the 1990s*, London: Lawrence and Wishart.
- Hammarström, G., 1998, "Offentlig eller Privat Finansiering?" *Socialvetenskaplig Tidskrift* 4, pp.315-333.
- _____, 2000, *Visioner eller realiteter? Forskarseminarium*, Umeå Folkets Hus, Umeå, January 19-20.
- Hayduk, L. A., 1987,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LISREL*,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Heath, A. F., Jowell, R., Curtice, J., Evans, G., Field, J. and Witherspoon, S., 1991, *Understanding Political Change: The British Voter 1964-1987*, Oxford:

- Pergamon Press.
- Hernes, H., 1987, *Welfare State and Woman Power: Essays in State Feminism*, Oslo: Norwegian University Press.
- Jenkins, J. C. and Wallace, M., 1996, "The Generalized Action Potential of Social Movements", *Sociological Forum* 11, pp.186-208.
- Jöreskog, K. and Sörbom, D., 1988, *PRELIS A Program for Multivariate Data Screening and Data Summarization*,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 _____, 1993, *LISREL8: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Inc.
- Kangas, O., 1995, "Attitudes on Means-Tested Social Benefits in Finland", *Acta Sociologica* 38, pp.299-310.
- Kemeny, J., 1981, *The Myth of Home-Ownership: Private Versus Public Choices in Housing Tenu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_____, 1995, *From Public Housing to the Social Market*, London: Routledge.
- Kriesi, H., 1998, "The Transformation of Cleavage Politics: The 1997 Stein Rokkan Lectur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33, pp.165-85.
- Marklund, S., 1988, *Paradise Lost?* Lund: Arkiv.
-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me, J., 1990, *Pension Rights in Welfare Capitalism*, Edsbruk: Akademityck AB.
- Parkin, F., 1968, *Middle Class Radicalism*,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Peterson, O., 1991, *Democracy and Power in Sweden.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14(2).
- Pierson, C., 1991, *Beyo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Polity Press.
- Piven, F. F., 1985, *Women and the State: Ideology, Power, and the Welfare State*, In *Gender and the Life Course*, edited by A. S. Rossi. New York: Aldine.
- Quadagno, J., 1990, "Race, Class, and Gender in the U.S. Welfare State: Nixon's Failed Family Assistance Pla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5, pp.11-28.

- Sainsbury, D., 1994, *Women's and Men's Social Rights: Gendering Dimensions of Welfare States*, In *Gendering Welfare States*, edited by D. Sainsbury. London: Sage.
- _____,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unders, P., 1987, *Social Theory and the Urban Question*, London: Urwin Hyman.
- _____, 1990, *A Nation of Home Owners*. London: Urwin Hyman.
- Shaver, S. 1998. "Universality or Selectivity in Income Support to Older People?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Issues", *Journal of Social Policy* 27(2), pp.231-54.
- Sihvo, T. and Uusitalo, H., 1995, "Economic Crises and Support for the Welfare State in Finland 1975-1993", *Acta Sociologica* 38, pp.251-62.
- SOU., 1990, *Demokrati Och Makt i Sverige*, SOU, vol. 1990:44. Stockholm: Allmänna förlaget.
- Steinmo, S., 1993, *Taxation and Democr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vallfors, S., 1995, "The End of Class Politics? Structural Cleavages and Attitudes to Swedish Welfare Policies", *Acta Sociologica* 38, pp.53-74.
- _____, 1997, "Worlds of Welfare and Attitudes to Redistribution: A Comparison of Eight Western Nation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3(2), pp.283-304.
- Taylor-Gooby, P., 1991, "Welfare state Regimes and Welfare Citizenship",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 pp.93-105.
- Walby, S., 1990, *Theorizing Patriarchy*, Oxford: Blackwell.
- Wennemo, I., 1994, *Sharing the Costs of Children*, Edsbruk: Akademitryck AB.
- Wilensky, H. L., 1976, *The New Corporatism, Centr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London: Sage Publications.
- Zetterberg, H., 1985, *An Electorate in the Grips of the Welfare State*, Stockholm: Swedish Institute for Opinion Polls.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Koreans' Pro-Welfare Attitude Cleavage and its Path Structure

Ahn, SangHoon*

This study aims at statistically evaluating applicability of welfare status theory of welfare politics in the Korean context, by using Korea Welfare Panel Survey of 2006. Welfare status theory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approach of non-class political view of welfare politics. It is composed of 3 dimensions of welfare-related interests, that is, status as welfare beneficiary, status as welfare taxpayer, and status as welfare service provider.

This study explores the path structure of welfare political variables, by analysing confirmative path model which is based 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from the welfare status theory.

Analytical results of the study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otal model fit is acceptable, which means the analyzed model adequately reflects the data. Secondly,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level, disability level are all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oretically plausible. Thirdly, public employment and public assistance benefit level are also statistically and theoretically acceptable, which confirms the validity of theory of welfare status.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hoonco@snu.ac.kr)

Although the variable of income level is not significant and reveals the opposite sign of coefficient, we can conclude that welfare-status-based politics exists and is working in Korean context, too.

key words : non-class theory, welfare politics, welfare status theory,
confirmative path model, LISREL